

정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농민 생존권 위협”

최대 쌀 생산 전남 1만5천ha 대상
“쌀값 하락 원인 농민에게 떠넘겨”
쌀 과잉 공급 원인 ‘수입 쌀’ 지목
“대체작물 재배 등 장기적 지원을”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8만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자 벼 재배 농민과 농민단체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의 재배면적 감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각 시·도에 올해 총 8만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인 69만8000ha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

산하면 41만톤에 달한다.

특히 재배면적 감축안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남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9000톤의 쌀을 생산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감축 규모는 1만5831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해남이 2184.6ha로 벼 재배면적 감축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영암 1573.6ha △고흥 1378.3ha △나주 1342.9ha △영광 1082ha △강진 999.7ha △보성 927.5ha 등이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공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영농권 및 경작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지자체 공공비축미 물량을 감축하거나 사회간접자본 대상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식량안보를 흔들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하라”며 “농도인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관련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미참여 농가 페널티 부여는 불합리하며, 감축 면적에 대한 공익 직불금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 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쌀 과잉 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 쌀은 외면하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해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 농민회 관계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재배면적 8만ha에서 나오는 쌀 생산예정량이 수입쌀 규모와 맞먹는 41만8000톤으로 추정되는 만큼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9년동안 재배면적 감축 및 고령농 은퇴 등을 통해 8만ha에서 생산 가능한 41만톤 규모의 쌀 생산량을 줄였음에도 1년 만에 또 다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 대비 실질적인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만큼 쌀 생산량 증가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쌀 수입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입 쌀 전체 물량 중 90% 가량은 가공용·주정용 등으로 사용되는데다, 밥쌀용 쌀 판매는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을 고려해 방출 시기와 그 양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며 “실제 2023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밥쌀용 수입쌀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현직 신분 헌정사상 최초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빨간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아 변론 시작을 기다렸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광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묻는 질문에는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신 곁에

GWANGJU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